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2007. 8. 10.

전문위원 이 주 형

목차

I. 들어가며	1
II.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	3
1. 재판부간 양형편차	3
2.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12
3. 온정주의적 형 선고 경향	24
4. 집행유예의 남발	29
5.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점	38
6.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45
7.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48
7.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48
III. 결론(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의필요성)	48
IV. 부록(신문기사 사본)	52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I. 들어가며

그간 우리나라의 양형을 비판하는 말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들어본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무줄 양형’, ‘감에 의한 양형’,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전관예우’ 등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돈이 있으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으로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돈이 없으면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일 것이다. 또한 고무줄 양형이라는 것은 비슷한 사안임에도 재판부별로 형량이 다르고 아니면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고, ‘감에 의한 양형’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없이 판사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양형의 문제점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는 말도 일정한 기준없이 양형을 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비꼬아 하는 말이고, ‘전관예우’는 역시 위 말들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현직의 판사나 검사들이 얼마전까지 함께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변호사보다 더 유리하게 형을 선고해 주는 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위와 같은 용어들 속에 우리나라 양형 관행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양형 실무 및 양형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다. 다만 판결에 미치는 양형인자에 대한 연구나 통계분석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필자로서는 단편적인 통계나 신문기사 등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II.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판부간 양형편차

우리나라 법원 양형 현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별 양형편차 및 지역적 양형편차는 항상 양형의 공정성이 이슈가 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인 재판부별 편차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양형통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최근 검찰에서 검찰의 구형량 대비 법원의 선고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 구형량에 대비한 법원의 선고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것이 있어 이를 참고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아래 표1,2,3과 같다.

[표1: 부산지법 재판부별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비율]

선고형 재판부 ¹⁾	구형 1/2 이상	구형 1/2 미만 ~ 1/3 이상	구형 1/3 미만
1단독	63.1(65)	34.0(35)	2.9(3)
2단독	93.6(338)	2.2(8)	4.2(15)
3단독	94.7(373)	2.0(8)	3.3(13)
4단독	77.0(177)	15.2(35)	7.8(18)
5단독	65.3(113)	28.3(49)	6.4(11)
6단독	46.9(76)	41.4(67)	11.7(19)
7단독	61.1(127)	31.3(65)	7.6(16)
8단독	69.9(135)	23.8(46)	6.3(12)
9단독	63.7(100)	30.6(48)	5.7(9)
12단독	76.2(291)	8.6(33)	15.2(58)
15단독	52.6(100)	43.2(82)	4.2(8)
16단독	75.1(220)	8.5(25)	16.4(48)
합의5부	65.4(138)	21.8(46)	12.8(27)
합의6부	53.5(68)	33.1(42)	13.4(17)

1) 2007. 2. 개편 전의 재판부

[표2: 대구지방법원의 재판부별 실형선고율 및 실형 선고사건의 구형량 대비 평균 선고형량률]

재판부 \ 구분	실형선고율 (총 실형선고인원/ 총 실형구형인원)	평균 선고형량률 (총 선고개월/총 구형개월)
합의11부	52.78%(38/72)	48.68%(1360/2794)
합의12부	47.44%(37/78)	46.89%(1418/3024)
1단독	40.91%(45/110)	49.58%(585/1180)
2단독	32.79%(40/122)	47.93%(463/966)
3단독	35.00%(42/120)	50.30%(667/1326)
4단독	35.00%(35/100)	43.56%(426/978)
5단독	41.10%(67/163)	48.54%(930/1916)
6단독	28.47%(41/144)	41.99%(456/1086)
7단독	24.07%(26/108)	50.00%(262/524)
8단독	26.15%(34/130)	45.45%(454/999)
9단독	16.67%(19/114)	39.68%(150/378)
11단독	11.54%(12/104)	51.39%(111/216)
합계	31.94%(436/1,365)	47.33%(7,282/15,387)

※ 9, 11단독은 교통전담부

※ 「실형 구형-실형 선고」 사건의 구형량 대비 평균 선고형량 분포
- 39.68%(9단독) ~ 51.39%(11단독)

[표3: 대구지방법원의 정식재판청구 사건 감액률 및 구형량 대비 평균 선고형량률]

재판부 \ 구분	감액률(인원) (감액인원/총인원)	평균 선고형량률(천원) (총 선고액/총 구형액)
10단독	56.81%(221/389)	76.77%(523,800/682,300)
12단독	45.65%(147/322)	82.72%(485,900/587,400)
13단독	66.94%(164/245)	78.24%(336,600/430,200)
합계	55.65%(532/956)	79.20%(1,346,300/1,699,900)

위 부산지방법원의 통계를 보면 3단독 재판부의 경우 검찰 구형의 1/2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가 94.7퍼센트이고, 그 1/2 이하로 선고한 경우는 5.3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6단독의 경우 구형량의 1/2 이상을 선고한 경우는 46.9퍼센트에 불과하고 41.4퍼센트가 1/2이하 1/3이상이며 11.7퍼센트가 1/3 이하로 구형량 대비 선고형의 비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구공판의 경우 어느 정도 내부 기준을 가지고 검사장 내지 차장검사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재판부의 판결 성향 또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건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약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 엄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온정주의적이고 경미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 대구지방법원의 재판부별 실형선고율 및 실형선고사건의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률 표를 보면 재판부에 따라 실형 선고율이 일반 단독만 보더라도 최고 41퍼센트와 최저 24.07퍼센트로 20퍼센트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만약 합의부를 포함시킨다면 52.78퍼센트까지 30퍼센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교통전담부의 경우까지 포함시킬 경우 11.54퍼센트로 약50퍼센트의 차이가 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감액건수의 비율이 12단독은 45.65퍼센트이고 13단독은 66.94퍼센트로 21퍼센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결국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출신 변호사 등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재판부로 배당되기를 원하는 피고인들도 상당 수 있다²⁾. 사건 배당

2) 이는 필자 본인의 경험으로 199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서 형사항소심 형사별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교통사고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두 개의 재판부가 있었는데 한 재판부는 형 선고가 상당히 엄격하였고, 다른 한 재판부는 아주 온정주의적인 형을 선고하였는데, 교통사고로 과실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유사한 사안에서 한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되는 반면 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해 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고, 당시 필자가 수원구치로소로 피고인 접견을 가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자신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온건한

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특별재판부 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원 내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형사·감호 사건을 맡을 경우 해당 특별재판부가 재배당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원의 자구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배당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보도가 있다³⁾.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열린 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24개 고·지법 특별재판부 배당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평균비율은 무려 48.4퍼센트에 달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의 경우 배당사건의 78.1퍼센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외에도 의정부지법 65.9퍼센트, 수원지방법원 64.4퍼센트, 대구지방법원 52.9퍼센트 등 주로 지역 법원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율이 높았다. 그 만큼 향판과 지역 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가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2005년 1심 형사구판사건 집행유예 선고율이 35.4퍼센트이나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이보다

재판부로 배당이 되었으면 될 듯이 기뻐하고 강성 재판부로 배당이 되었으면 의기소침해하는 성향을 보였다.

3) “뉴스앤뉴스” 2006. 10. 19. 기사 “노회찬 ‘중앙은 경판이, 지역은 향판이 소송 싸늘이’”

13퍼센트나 높은 48.4퍼센트로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는 특별재판부의 존재의의가 무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법원에 설치된 얼마 되지 않는 형사부에서 형을 엄하게 선고하는 강성 재판부와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온건 재판부가 있는 경우, 특히 그 온건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인 경우 피고인들 특히 구치소내 피고인들은 그러한 재판부별 판결 성향을 비교, 분석해 본 후, 자신이 강성 재판부로 배당이 된 사실을 알고는 전관을 선임하여 온건 재판부인 특별재판부로 재배당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판부별 양형 편차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사한 전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유사한 형이 선고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실형이나, 집행유예냐가 법의 엄정함에 기인하지 않고 속칭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 내지 ‘운에 따른다’는 인식을 가져와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재판부간 양형편차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검사인 Thomas Zeno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제정과 관련하여 재판부간 양형 편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가 있다. 그는 “판사 개개인만 놓고 볼 때 각 판사는 나름대로 자신이 맡은 재판들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린다. 즉,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으로는 일관성

이 있다. 그러나 여러 판사들을 모아 놓고 각 판사들이 각자 내린 판결들을 비교해 보면, 판사들의 관심사, 성향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각 판사 개인의 일관성 보다는 한 집단으로써의 판사들이 유사한 사안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과거 미국 연방에서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이러한 판사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판사들이 양형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대법원이 Booker 판결을 통해 다시 판사들의 재량을 확대시킨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유의해야 하고, 어떤 요소들이 형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점들이 무시되어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⁴⁾. 이와 같이 미국 양형개혁법의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불공정한 양형편차(unwarranted disparity)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 양형개혁법에서는 “양형의 의도에 부합하는 확실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양형 관행의 수립에서 고려되지 못한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를 고려하는 개별화된 양형을 허용하여 충분한 탄력성을 유지하는 반면,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유사한 전력을 지닌 피고인들 사이에 부당한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다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영·미 양형위원회 운용실태 보고 72쪽 내지 73쪽, 대검찰청 양형기준연구팀, 2007. 6.

5) 28U.S.C.§991(b)(1)(B)

결국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없애고,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유사한 범죄전력을 가진 피고인들 사이에 부당한 불균형을 없앨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위원회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양형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에는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조직법 규정과 양형위원회 규칙이 양형위원회의 설립 목적 내지 업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를 검토해 보면 양형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은 ‘국민’의 관점에서보다는 ‘법원’의 관점에서 기재된 것으로 판사들의 양형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을 양형위원회 설치 이유로 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의 설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 위 양형위원회 규칙은 법원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조직법의 하위규정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판사의 양형결정

권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여 기소(구속, 불구속기소)한 기업범죄 117건(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을 상대로 법원의 선고형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놀랍게도 분석대상 사건 117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107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4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겨우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에서 수사한 기업범죄의 실형 선고율이 겨우 5%에 불과한 것이다.⁶⁾ 이는 중요 기업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율이 기업범죄를 제외한 일반사건의 실형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개개의 사건 내용이 다르고, 사건마다 각각 다른 양형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기업총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선고형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범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온정주의적인 형이 선고되어온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6) 내일신문 2007년 6월 14일 21면

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재판에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판사의 양형재량이 너무 크며, 이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재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재력을 이용하여 전관 변호사 등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정 안팎에서 효과적으로 별론 활동을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양형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기업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2007. 6. 경에 화이트칼라범죄,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고, 위 공청회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끈 15개 대기업 사주들에 대한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의 범죄에 대한 형 선고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본 항목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위 대기업사주들에 대한 형의 선고 내용은 표(4)와 같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내용과 선고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한화의 김승연은 2002. 10.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게 10억원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되었다. 2) 한솔 조동만은 1997. 한솔텔레

[표4] 15개 대기업 사주들에 대한 형 선고 내용

기업총수	죄명	1심	2심	종국결과
한화 김승연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확정
한솔 조동만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향소포기	확정
쌍용 김석원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향소포기	확정
신동방 김명수	증권거래법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추징금 77억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추징금 동일	확정
부영 이중근	특경가법위반(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새한 이재관	특경가법위반 (사기, 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확정
한라 정몽원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한진 조양호	특경가법위반(횡령)	징역 4년 벌금 300억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확정
해태 박건배	특경가법위반(사기)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진로 장진호	특경가법위반 (사기,배임,횡령)	징역 5년6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별건으로 동일형량 또 선고	확정
고합 장치혁	특경가법위반(사기)	징역 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SK 최태원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심 진행중
동아 최원석	특경가법위반(배임)	징역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두산 박용성	특경가법위반(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1심과 동일	확정
현대 정몽구	특경가법위반 (횡령, 배임)	징역 3년	진행 중	

콤 소유의 사옥 임대보증금과 어음 등 합계 45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아무런 손해보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한솔아이글로브의 한국통신엠닷컴에 대한 1,217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한솔텔레콤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 등 4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포기로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쌍용 김석원은 쌍용양회의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쌍용양회의 자금 178억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장계열사인 남유산업에게 대여하고 남유산업은 이 돈을 대여하도록 하여 쌍용양회에게 178억원의 손해를 입도록 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 등 6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4) 신동방 김명수는 허위의 반기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3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285억원을 청약대금으로 납입받고, 사모인수를 공모인수로 가장하여 100억원의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는(증권거래법위반) 등 총 8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벌금, 추징은 동일)되었으며 상고기각으로 제2심의 형이 확정되었다. 5) 부영 이중근은 직영으로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의 일부를 위장협력업체에게 하도급 준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공사비보다

8% 내지 15% 과다계상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70억원 가량을 마련한 후 120억원을 자신의 계열사지분을 확장하기 위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법인세 74억원과 종합소득세 34억원을 포탈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등) 등 5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았다. 6) 새한 이재관은 새한 등 회사의 1998년과 1999년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1,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48억원을 대출금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이사회 결의 없이 새한의 돈 712억원을 변제자력이 없는 새한미디어에 부당지원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배임 등) 등 6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7) 한라 정몽원은 한라중공업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시멘트 등이 지급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시멘트에 360억원, 한라시멘트에 59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변제능력을 상실한 한라중공업, 한라자원 등에 만도기계, 한라건설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시멘트에 7,815억원, 한라건설에 1,104억원의 손해를 가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 등) 등 6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8) 한진 조양호는 회사공금 1,09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세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반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합계 25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등) 등 총 4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9) 해태 박건배는 해태제과의 1994년과 1995년의 재무제표에 7,791억원 상당을 분식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원의 보증을 받고 8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0) 진로 장진호는 진로의 자금을 자금잠식상태에 빠진 계열사에 지원하고, 회사의 자금을 형제간의 사적분쟁 해결금으로 전용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편취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기, 배임, 횡령 등)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는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1) 고합 장치혁은 고합의 1995년과 1996년의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2,30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보증과 회사채매입대금 892억원 및 4,857억원의 신용대출을 제공받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기) 등 8

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 SK 최태원은 JP 모건과의 금융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법인에게 941억원, 미국법인에게 173억원의 손해를 가하는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4건의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3) 동아 최원석은 2개의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제1사건은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동아생명보험의 실권주 500억원 상당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대한통운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등 3개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으며, 제2심은 징역 2년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 제2사건은 동아건설의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의 재무제표 분식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7,230억원을 편취하는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 6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제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제1사건의 파기환송사건과 병합된 사안임)을 각 선고하였다. 14) 두산 박용성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과 위장계열사인 동현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모두 286억원의 비자금을 만

들어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횡령하고 2천838억원 가량을 분식회계하여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80억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제2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15) 현대 정몽구는 2001. 2.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마치 회사의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0억4,313만7,888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284억7,598만3,559원을 불법 정치자금, 여수박람회 추진비용, 개인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여억원의 손해끼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위 총 15건의 사건 중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9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5건, 기타 1건으로 제1심의 실형율은 60퍼센트이고, 제2심에서는 실형을 유지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위 사건들만 놓고 본다면 항소한 피고인들은 전부 실형을 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파기율이 56%인데 반하여 위 기업총수들의 항소심 변경율은 11건 중 9건인 81.8%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다. 따라서 법원이 기업총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의 양형변경과 관련하여 특별히 대우를 해 준 것으로 분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총수들에 대한 확정형의 형량은 벌금 3천만원이 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1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3명,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8명, 기타 2명이다. 가장 경미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동방 신명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이나 외국환관리법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진로 장진호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미화 변호사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한 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기업총수들에 대한 실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특유하거나 유리한 특정한 양형요소를 추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기업총수들 사이에 특이한 양형상의 격차가 있는지 살펴보면 동종의 죄명을 놓고 볼 때 유의미한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동종의 범죄와 관련하여 모두 3년의 자유형에 4년 내지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 법원이 기업총수라는 신분에 대하여 암묵적 양형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표현을 하였다.

또한 위 논문은 위 판결을 2006.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전

국법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114건의 분석자료⁷⁾와 비교해 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의 71.2%이고,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은 28.07%이며,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평균형기는 2.88년이나 동종 범죄에 관한 상기 기업총수들의 구금형이 거의 없고⁸⁾ 일반인이라면 형기가 2.88년이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있음에 반하여 기업총수들은 3년의 선고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으므로, 그 처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전체 범죄의 실형의 추측형기와 비교하면 전체범죄의 실형추측형기가 2002년 1.85년, 2003년 1.77년, 2004년 1.76년, 2005년 1.79년이므로 대략 2년이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일반범죄자들이 별도의 집행유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형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총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 내지 4년을 선고받고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상의 예우가 남다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미화 변호사는 위 논문에서 구속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일반적인 경우 구속피고인의 구금형 확률은 82% 정도이고, 불구속 피고인의 구금형 확률은 50%인

7) 분석의 편의상 설민수 판사의 상기논문 제16면 이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임의적 비교이므로 통계적인 정확성은 없는 것이지만 경향을 비교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형위원회의 의미있는 조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8) 최근의 선고형을 보면 위 정몽구 회장의 1심(불구속상태임)과 김우중 및 임창욱의 실형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소유주에 관한 의미있는 실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 기업총수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김승연과 박용성이 모두 집행유예를, 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도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82%의 구금형 확률이 아닌 매우 낮은 구금형 선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구속여부를 구금형의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지나친 차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설민수 판사가 화이트칼라 범죄만을 보면 구속은 그 어떤 양형요인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인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일변도의 판결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올해(2007.) 초 상장사 임직원들의 총 횡령액수는 작년 297억원에 비해서 1,606억원으로 5.6배나 증가하였고, 상장사 임직원의 사건당 횡령액수도 37억원에서 76억원으로 2.1배 상승하였다⁹⁾ 결국 위와 같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횡령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건당 횡령액수가 커지는 것은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형 선고 경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위 기업총수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미국 휴스턴 지방법원이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엔론사 사장 제프 스킨링에 대하여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한 것처럼 엄정하게 형을 선고하였다면 과연 우리나라

9) sbs “그것이 알고 싶다”-누가 회장님의 형을 가볍게 하는가“에서 제시된 통계 결과임

에서 위와 같은 상장기업의 횡령·배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판결들은 전혀 범죄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숨방망이식 판결로 인해 위와 같은 범죄들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히 피해자가 없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석방을 한다던가 하는 등으로 약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업범죄의 경우 그 투자자 등은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상장사인 경우에 회사 사주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그 손해가 고스란히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회사에 전 재산 상당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모두 무일푼 신세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으로, 위와 같은 류의 범죄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써 엄격히 처벌해야 할 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휴스턴 지방법원의 심레이크 판사가 엔론사의 제프 스킨링

에 대하여 징역 24년에 벌금 1,800만 달러를 선고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수백명을 평생 가난 속에 살게 한 죄를 지었다’고 책망한 사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온정주의적 형선고 경향(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 논의의 배경

창원지방법원은 2006. 2. 27.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 양형기준 마련’, ‘불구속재판강화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재판실무개선안을 발표하였고, 당시 이러한 창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실무개선안은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특히 불구속재판 강화방안은 검찰의 수사업무 및 형사사법제도 운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의 ‘불구속재판원칙 강화방안’은 1)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2) 구속적부심 인용 최대화, 3)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보석제도 운용, 4) 1심 실행선고시 법정구속 원칙화의 인신구속 4대 원칙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점은 불구속재판원칙이 형벌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1심 실행 선고시 법정구속 원칙화를 강조하였던 바,

원칙 시행 전후 법정구속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불구속재판원칙 선언 이후 선고형 양형 분석

아래에서 제시한 통계는 불구속재판원칙 강화방안이 발표된 2006. 2. 27.을 기준으로 원칙 발표 전후 각 1년 동안 창원지법에서 선고된 1심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자료는 원칙적으로 검찰통계시스템에 의존하였고, 다만 통계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었던 자료는 위 기간 동안의 재판결과 통지부를 수작업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각 기간 동안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나, 구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불구속재판원칙 발표 이전인 2005. 3.부터 2006. 2.까지 사이에는 구속기소되어 재판받은 인원이 1,634명(43.7%), 불구속기소되어 재판받은 인원이 2,105명(56.3%)이었으나, 2006. 3.부터 2007. 2.까지 사이에는 1,141명(32.4%) 대 2,385명(67.6%)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은 인원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1) 구속 기소의 경우

{단위 : 명}

	구속기소인원	불구속기소인원	계
2005. 3. ~ 2006. 2.	1,634(43.7%)	2,105(56.3%)	3,739(100%)
2006. 3. ~ 2007. 2.	1,141(32.4%)	2,385(67.6%)	3,526(100%)

※ 해당기간 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함

위와 같이 구속기소된 인원이 500명 가까이 감소한 이유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구속인원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불구속재판원칙 시행 이전에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인원이 890명(54.46%)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735명(64.41%)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높아졌다. 불구속재판원칙 시행 전후 기간을 비교하면 집행유예 선고인원이 646명에서 346명으로 대폭감소하였고, 집행유예 선고율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예전에는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던 인원들이 위 원칙 시행 이후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불구속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명)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타 (무죄,공소 기각 등)	계
2005. 3. ~	890	646	56	.	42	1,634
2006. 2.	(54.46%)	(38.75%)	(3.36%)	.	(2.52%)	(100%)
2006. 3. ~	735	346	19	.	41	1,141
2007. 2.	(64.41%)	(28.95%)	(1.59%)	.	(3.43%)	(100%)

2) 불구속 기소된 경우

불구속기소된 인원 중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인원은 339명에서 340명으로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 명)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타 (무죄,공소 기각 등)	계
2005. 3. ~ 2006. 2.	339 (16.10%)	1,184 (56.25%)	470 (23.32%)	37 (1.75%)	75 (3.56%)	2,105 (100%)
2006. 3. ~ 2007. 2.	340 (14.25%)	1,303 (54.63%)	575 (24.10%)	7 (0.29%)	160 (6.70%)	2,385 (100%)

다. 법정구속 감소 경향

불구속재판원칙 시행 전 1년 동안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 317명 중 법정구속된 인원이 144명으로 45.43%를 차지하였던 데 반해, 원칙 시행 후 1년 동안은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 327명 중 법정구속된 인원이 89명으로 27.22%에 불과하다.

(단위 : 명)

	실형선고인원	법정구속인원	비율
2005. 3. ~ 2006. 2.	317	144	45.43%
2006. 3. ~ 2007. 2.	327	89	27.22%

※ 불구속기소 사건 중 법원에서 통상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제외하였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던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주류이다. 이는 불구속재판원칙의 영향으로 1심 선고단계에도 피고인의 구금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불구속재판원칙과 법원의 온정주의적 형선고 경향이 결합하여 초래한 결과로 판단된다. 수사 단계, 기소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해 재판장들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라. 불구속재판원칙 일반화와 그 문제점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문언상으로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의 확대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며, 법원의 양형 선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원칙을 적용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위 제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흐를 경우 법원 스스로 우려하였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형벌권 약화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경

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이 강조하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법정구속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야 가능할 것이다.

4. 집행유예의 남발

가. 대구지방법검찰청의 집행유예 선고율 통계

대구지방법검찰청에서 2007년도 1/4분기(1~3월) 구공판 사건 1,559명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선거사범) 구형을 한 피고인들 167명을 제외하고 검찰에서 오로지 실형을 구형한 1,392명에 대한 선고형을 분석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구공판사건(구속·불구속) 사건 선고 현황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타	합계
436 (31.32%)	825 (59.27%)	104 (7.47%)	27 (1.94%)	1,392명 (100%)

이를 구속 기소한 사건과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형량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여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구속 구공판 사건 선고 현황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타	합계
341 (54.56%)	254 (40.64%)	23 (3.68%)	7 (1.12%)	625명 (100%)

○ 불구속 구공판한 사건의 선고형 현황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타	합계
95 (12.39%)	571 (74.45%)	81 (10.56%)	20 (2.61%)	767명 (100%)

위 대구지방법검찰청의 1/4분기 통계수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구공판 사건 중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60퍼센트 정도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 8퍼센트를 감안하면 30퍼센트 정도만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구속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도 40퍼센트가 집행유예, 벌금형이 약 4퍼센트로 실형 선고율은 54.56퍼센트 정도이며 불구속 구공판된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75퍼센트 정도이고, 벌금형으로 석방되는 11퍼센트 정도를 제하면 실형 선고율은 12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검찰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과 벌금을 구형한 선거사범까지 구공판 사건에 포함시킨다면 그 실형 선고율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2. 우리나라 집행유예 선고 관행의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집행유예 선고 관행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여러 나라의 집행유예 규정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와 실제 각 나라의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이 이 정도에까지 이르는지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규정의 차이부터 집행유예 운용현황에 이르기까지 실증적이거나 비교법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논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구공판사건의 6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바, 이는 법원의 판사들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는 비난과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형의 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의 경우 양형개혁법 제정 이전인 1984년에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48퍼센트이었으나 양형개혁법 시행이후인 2002년에는 그 비율이 9.1퍼센트로 줄어들었다. 2003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선고된 중요범죄(primary offence) 69,023건에 대한 선고형 분석 내용을 보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수

가 57,509건(83.3%), 징역 및 공동체구금 등 혼합형 건수가 2,045건(3.0%), 보호관찰 및 공동체구금의 혼합형이 3,272건(4.7%), 보호관찰만 선고된 사건 수는 6,197건(9.0%)이었다. 그 결과 교도소내 인구수도 1980년대 24,363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63,528명으로 늘었다.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사들의 집행유예 재량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법 시행 이전의 형이 그 범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양형기준법에 확실히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였다.¹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SK의 최태원, 동아 최원석 등이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형의 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특별한 기준도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통계를 통하여 이미 살펴보았지만 1심에서 실형 3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인지 그 기준을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데에는 최소한 여러 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실형의 징역 3년을 비교해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징역 1년의 실형이 더

10) U.S. Sentencing Commission, Fifteen Years of Guideline Sentencing, 2004. 7쪽

중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양형 관행에 의하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는 징역 1년6월, 징역 2년, 징역 2년6월이 점진적으로 더 중한 것이므로 1심에서의 징역 3년형을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 징역 1년6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한 단계를 전혀 거침이 없이 갑자기 여러 개의 단계를 바로 건너 뛰어 징역 3년에 바로 집행유예 5년의 속칭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인지, 1심 판결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1심 선고시에 고려되었던 양형인자 외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를 인정하고도 1심과 2심에서 이토록 현격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입법론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실형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 5년의 범위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의 경우 그 범죄수준이 0월부터 6월 사이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경우에만 순수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12개월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만을 선고할 수는 없고 집행유예와 공동체구금의 혼합형만이 가능하다. 하한이 1년의 구금형을 넘어가는 범주일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8월

부터 16월 사이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형과 공동체구금의 혼합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토록 광범위한 집행유예 선고 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오로지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온 것이 또한 여러 가지 양형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다음 전관예우의 문제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온정주의적 형 선고 관행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컨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형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면서 법을 준수하여 살지 않고 다시 법을 어긴 경우에 실형을 선고토록 함으로써 법률의 엄정함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인 개인에 대하여도 공동체에서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반 예방적 및 특별예방적인 관점이 모두 고려된 제도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피고인에게 실형은 고사하고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그러한 법의 취지를 완

전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전관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속칭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경우 또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과한 위 형법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새로운 별개의 범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일반예방적 차원이나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할 법원이 사적인 인간관계 내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객관적, 공적 업무를 방기하고 결국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실형을 면해 주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누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고적으로 현행 형법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여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률규정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도과시켜 주기 위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연기해 주거나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러한 조건으로 전관이 선임되는 예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

네 번째는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유예 형의 선고이다. 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다른 유사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비하여 징역 형을 대폭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상황이라고 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예상하여 징역 6월 정도만 선고하는 경우이다¹¹⁾. 이러한 경우는 양형의 지도원리인 책임원칙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1년을 살아야 함에도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가벼운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형의 선고 또한 형법이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취소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형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11)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21세기 한국의 집행유예제도,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6쪽 내지 148쪽

더 낮게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취급되는 ‘합의’와 관련된 사항이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기간을 주기 위해 재판기간을 무리하게 연기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실제 배상하지는 않고 속칭 ‘외상합의’를 하고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이 무리하게 합의를 하기도 하고, 판결 선고 후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합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대하게 작용하는 양형인자로서, 피해자와의 명목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합의에 따른 형의 감경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정책적 차원의 심각한 고려를 통해 선고되어야 할 집행유예 형의 선고에 있어서 판결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이유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유예 형을 선택하였다는 점만이 판결문에 나타날 뿐이다. 제1심에서 준엄하게 피고인의 죄를 꾸짖던 법원이 제2심에 들어

와서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 형을 선택한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적격자는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인 집행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피고인이라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기업총수들에게 집행유예의 적격이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다. 사실 집행유예 제도가 양형단계에서 구속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기 위한 것처럼 운영되는 것이 현실인 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정상이 중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기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형벌의 정당성을 은전거래로 전락시키고 일반예방적 효과나 특별예방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처럼 구금형의 범죄억제효과가 큰 경우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당한 사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의 남용을 막고 정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점

가. 전관예우의 의미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로 전관예우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전관예우라 함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이전에 동료였던 판사와 검사가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전관이었던 변호사를 예우하여 전관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직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을 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현직의 판·검사들이 사건을 더 신중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건에 비하여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온 것도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언론지상에 나타난 통계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언론에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수임료도 많고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고심 사건의 변호인 명단에 전 대법관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 대법관들이 기록을 관심있게 읽어본다는 것이다.

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현황 및 심리불속행 기각률

이와 관련하여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실에서 밝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사건 비율 및 심리불속행 기각률을 보면,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들의 수임사건을 조사한 결과 13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63퍼센트가 대법원 상고사건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을 보면 일반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퍼센트에 이르지 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¹²⁾. 즉, 일반 변호사가 제기한 상고사건의 경우 10건 중 4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10건 중 채 1건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고 0.6건 내지 0.7건 정도밖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 비율상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대법관들도 일반 변호사들의 사건과 달리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의 모 변호사는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을 처리할 때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인들은 일단 자신이 관계된 사건이

12) 서울신문 2007. 8. 8.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다. 향판의 경우

한겨레 신문에서는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개업한 뒤 1년 동안 수임한 형사항소심 판결문 305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심의 선고형에 대하여 ‘사정변경없는 감형’을 받은 판결이 51퍼센트에 달한다는 보도를 하였다¹³⁾. 이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금 공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감형’을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의 양형부당 파기율 35.8퍼센트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향판 출신 변호사 가운데 ‘사정변경없는 감형’의 비율이 무려 83퍼센트에 이르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1심 선고 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사정의 변경, 즉 합의나 공탁 등으로 양형요소에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감형을 할 것인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오로지 재판장의 의사에 달려있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특히 향판 출신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준 항소심 재판관장들은 대부분

13) 한겨레신문 2007. 8. 2.자 9면

‘향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지역 변호사와 유착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 형사 항소심 재판장은 향판을 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장급 법관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1심의 형 선고에 대한 2심의 ‘사정변경 없는’ 감형은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며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은 결국 1심과 상소심 사이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형량이 적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위 한겨레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기사는¹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같은 연수원 동기인 향판인 재판장과 향판 출신의 변호사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이다. 사건 내용은 울산지검의 모 수사관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단속에 걸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위 수사관의 계좌와 위 업소 계좌에서 확인하고, 담당검사가 위 수사관의 자백과 공여자인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구속기소하면서 파면조치하였고, 위 피고인은 1심에서 모

14) 한겨레신문 2007. 8. 2.자 9면

든 혐의를 자백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예기치 않게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위 사건의 무죄판결 이유는 “당시 수사검사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다그치고 부장검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성씨와의 돈거래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회유해 검찰에서 거짓자백을 하였고, 1심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수사검사가 또 다른 범죄를 찾아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자백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만 받아들이고, 1심 담당 변호사와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위 기자가 부장검사와 피고인의 1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부장검사와 1심 담당 변호사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절대 그런 식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위 판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 사건의 재판장과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두 사람 다 울산지역 향판 출신이라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위 ‘향판’ 출신 변호사의 경우 항소심에서 20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9명(45%)에 대하여 ‘사정변경없는 감형’을 받았고, 이는 다른 국선변호인 등의 ‘사정변경없는 감형’이 약 19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 그 비율에 있어 2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위 한겨레 신문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향판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 분석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피고인이 17명이 되었는데, 대전법원 출신의 모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5명을 변론해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위 17명 가운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앞선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가 1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위 기자는 법원이 『형법 62조의 규정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왜곡해 감형한 것이다』고 표현하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형법의 규정을 원칙대로 해석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이러한 향판의 문제점은 쉽게 사라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향판 제도가 존재하고 향판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오려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그 지역에서 개업을 하려는 성향

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러한 관행이 쉽게 고쳐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 소결

이러한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일으키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로 이러한 관행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양형 인자에 대한 주장과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정에서 양형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한 양형관련 진술이나 제출된 양형 관련 자료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 또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양형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다투는 절차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일부 사건에 대

하여 보호관찰관을 통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방형사소송절차(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32장(Rule 32. Sentencing and Judgment)에서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은 자신이 작성한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피고인이 '최소기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적어도 판결 35일전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검사에게 전달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등 당사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방식은 보고서에 담겨져 있거나 생략된 자료 정보(material information), 양형 기준 범주(sentencing guideline ranges) 및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s) 등에 대하여 판결전 보고서 수신 후 14일 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이의서 사본을 상대 당사자 및 보호관찰관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보호관찰관은 당사자들을 만나 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보호관찰관은 추가 조사를 하고 판결전 조사 보고서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늦어도 판결 선고 7일 전까지 보호관찰관은 해결되지 않은 이의 사항, 그러한 이의의 근거, 보호관찰관의 그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는 판결전 조사

보고서 및 부속서(an addendum)를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제출
 해야 한다. 판결 시 법원은 '(A)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판결전 조사 보고서 및 부속서를 읽고 그 내용을 논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B) Rule 32(d)(3)에 의거, 피고인과 검사에게
 판결의 근거로 쓰였으나 판결전 조사 보고서에서 빠진 정보에
 대하여 요약 서면(a written summary)을 주거나 판사실(in
 camera)에서 요약 설명하여야 하고,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 당사자들의 변호인
 들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의 결론 및 기타 판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D)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 언제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to introduce evidence on the objections) 수락할
 수 있다. 판결 시(at sentencing) 증인이 증언할 경우(If a
 witness testifies at sentencing), Rule 26.2(a)² (d) 및 (f)가 적용
 된다. 일방 당사자가 Rule 26.2를 준수하지 않고 증인 진술을 하
 려 할 경우, 법원은 그 증인진술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판결
 시(at sentencing), 법원은 '(A) 판결전 조사 보고서 내용 중 다
 툼이 없는 부분(any undisputed portion)은 확인사실로(as a
 finding of fact) 수용할 수 있다 (B) 판결전 조사 보고서 내용

중 다툼이 있는 부분(any disputed portion) 또는 기타 논쟁사항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거나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어야 한다. (C) 이 규정에 따라, 법원 결정문의 사본(a copy of the court's determinations)을 교정국(the Bureau of Prisons)에 보내는 판결전 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정립되는 경우 양형요소에 대한 조사 절차가 미국 연방과 같이 상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판에 있어서 양형인자에 대한 분석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와서 보호관찰관을 통한 양형인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양

형절차 참여가 이루어진 바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미국 연방 형사소송절차 제32장(i)(4)항에서 “진술의 기회(Opportunity to speak)”를 규정하고, (B)항에서 “형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은 형 선고 관련 재판에 출석한 폭력이나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양형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그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출석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간에 법원은 아래의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i)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guardian), 만약 피해자가 18세 이하이거나 무능력자인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구성원 또는 법원이 지명하는 친족들, 만약 피해자가 죽었거나 자격이 박탈(incapacitated)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C)항에서는 “(i) 당사자의 신청 그리고 상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 법원은 Rule 32(i)(4)에 의해 그 진술을 녹화화면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역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일반적 법정진술권을 보장한 것으로 양형과 관련되어 별도로 주어지는 권한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재판 기간 중에 고지해 주거나 양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양형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합리적 양형설정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양형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나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 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 필요성

이렇듯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문제점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판결에 있어서 양형의 문제점이 체계적,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이유는 법원에서 재판부별 양형 결과를 확인하거나 법원별 양형결과를 확인하여 양형의 편차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조사된 바가 없고, 전관이 선임된 사건의 양형선

고 현황 등에 판결에 대한 통계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의 문제점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죄명 내지 사건별로 양형요소들을 추출하고 양형 이유설시를 상세히 하고 그 과정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별, 재판부별, 그리고 변호사별로도 판결 선고 결과를 입력하고 통계 분석을 하여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연구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차후 양형기준이 수립되면 이러한 양형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양형 요소를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 될 때에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그와 같은 관리를 해 나갈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대검찰청이 수사한 기업범죄자 실행률 5%”

민변 ‘기업범죄 양형 문제와 대안’ 토론회 ... 재판받은 기업총수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사해서 기소한 기업범죄 117건 중 실행이 선고된 사건은 6건으로 실행 선고율이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4일 개최한 ‘기업범죄 양형문제와 대안’ 토론회에 참석한 조재현 경사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입건인에 비해 유리한 선고를 받아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형은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기업범죄자 처벌 솜방망이 = 조경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기업범죄 117건을 상대로 법원의 선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107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4건으로 실행이 선고된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조 경사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판사의 양형재량이 너무 크다”며 “재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재력을 이용해 전관료회사 등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 법정 안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변호활동 등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민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다는 아니지만 기업범죄사건의 경우 선고형을 미리 정해 놓고 기기에 맞추어 양형이 유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 또 여러 번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해 안되는 형량 감경사유 = 주재 발표자로 나선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2004년부터 재판받은 기업총수 15명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모두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감경사유를 들면서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서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책무를 위반한 점을 중하게 내세운 후 해당 기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거나 해당 산업의 진작을 위해 헌신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상호보완된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의 동력 성취한 성과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타인의 신뢰를 배신한 것인데 이를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고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변호사는 “기업총수의 처벌위험성, 연령, 건강, 반성 등은 선고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식 양형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정집단에 대한 집행유예 남용은 그 집단의 존폐의식을 크게 흔들리게 되고 형벌의 예방적 효력을 급격히 약화한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 마련 시급 = 토론자들은 재판부가 기업범죄자의 형량을 선고할 때 충분한 양형조사와 함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의견을 보였다.

조 경사는 “법원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 직관적이고 정량화된 양형기준이 없애스위 ‘감’에 의해 선고형을 정한다”며 “재력을 가진 기업범죄자들이 제도적 비리점을 이용해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보다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는 “항소심이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에 대한 시정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판결서에 범죄의 정상이나 양형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형과정과 양형결과에 대한 사후심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기업총수 재판 현황

기업총수	형의	1심	2심	종국결과
한화 김승연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벌금 3천만원	확정
한솔 조동만	특정가법상 배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항소모기	확정
영웅 김석원	특정가법상 배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항소모기	확정
신동방 김영수	증권거래법 위반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 5억 추징금 77억원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벌금 추징금 동일	확정
부영 이종근	특정가법상 총경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120억원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확정
새한 이태관	특정가법상 사기 배임	징역3년	징역유예5년 사회봉사 400시간	확정
한라 정동원	특정가법상 배임	징역3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확정
한진 조영호	특정가법상 횡령	징역4년 벌금300억	징역유예 5년 벌금 150억	확정
해태 박건배	특정가법상 사기	징역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진로 장진호	특정가법상 사기 배임 횡령	징역5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 5년 보안료 추징금 1억 2천만 원	확정
고합 장지희	특정가법상 사기	징역 4년	징역 3년 집행유예6년	확정
SK 최태원	특정가법상 배임	징역3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상고심 진행중
웅아 최관석	특정가법상 배임	징역3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확정
두산 박용성	특정가법상 횡령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80억원	1심과 동일	확정
현대 정용구	특정가법상 횡령 배임	징역 5년	진행 중	

정 변호사는 “기업총수에 관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조사하고 충분한 자료와 연구가 있었다면 너무나 많은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족, 경제사정, 경력 등이 기

업총수에 의의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했다면 이러한 양형인자는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jin@naeil.com

한겨레

2007년 08월 02일 009면

법조계 또 다른 성역 '향판' (지역법관)

이윤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판예우 방지' 등 사법 개혁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역의 법원에서 포임 때까지 근무하는 일부 '향판'(지역법관)들의 행태는 새 간학 관심에서 밀리나 여전히 사법 개혁의 '심역'으로

남아 있다. <한겨레>는 법조계 최후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향판(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부장 판사 이상을 지낸 전국의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이 맡은 사건과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향판 제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겨레

2007년 08월 02일 009면

'향판'출신 변호사들 형사향소심 판결 살펴보니

이유없는 감형 51% '놀라운 승소율'

<한겨레>가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개입된 1년 동안 수임한 형사향소심 판결 305건을 분석했다. '사정변경 없는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가 51%였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금 공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감형'을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향소심 재판의 양형부담 과기율(35.8%)보다 1.4배나 높은 것이다. 실제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을 비교하면, 향판 출신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맡은 사건의 향소기각률은 19%로, 전국 형사향소심 사건 평균(5.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판 출신 변호사 가운데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이 무려 83%에 이르는 변호사도 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선고 뒤 향소심 과정에서 재심을 피하지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해 중대한 감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변경'이 없으면 피고인이 감형받을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특히 향판 출신 변호사들에게 이런 '특혜'를 준 향소심 재판장들은 대부분 향판이었다.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지법 출신 3명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재판장이 모두 향판이었다.

이들 법치기를 깨린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역 변호사와 유착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 형사 향소심 재판장은 향판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부장판사를 법관 현안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형사향소심 재판장들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높은 과기율과 양형변경률은 1심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소기각률도 19%뿐

감형비율 최고 83%까지

수임 사건 재판장도 '향판'

변호사-판사 '짬짜미' 우려



전국 14명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 실적

이름 (소속법률사무소)	소 (대구 지법)	가 (대전 지법)	나 (충주 지법)	다 (부산 지법)	라 (부산 지법)	마 (대구 지법)	바 (부산 지법)	사 (대구 지법)	아 (대전 지법)	자 (대구 지법)	차 (충주 지법)	승/양승 (대구지법)	전국 고등· 지방법원 평균 (2006년)		
홍도근(한정)	36	27	35	23	11	17	45	19	28	14	40	38	20	345	특제검정
황소기(한정)	5	7	5	2	1	0	8	4	5	5	12	3	4	64	통제검정
조승기(한정)	13	32	14	9	3	6	16	71	79	56	30	6	10	194	통제검정
사정변경없는 감형율	15	14	16	13	6	10	24	8	19	5	15	22	10	177	통제검정
사정변경없는 감형 비율(%)	39	64	46	57	55	83	13	42	38	38	56	56	56	214(83%)	50.2%
재임시기	2003년 5월	2004년 2월	2004년 2월	2005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2006년 2월

*표시는 사정변경없는 감형이 포함된 감형 비율임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1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재판장들은 또 "향소심의 높은 과기율은 1심과 향소심 사이에 상충작용을 일으켜 결국 형량이 적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고려부 기자 anuk@hani.co.kr

향판(지역법관) 서울이 아닌 지역의 법원에서 포임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을 말한다. 법원은 수십 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했던 향판 제도를 2004년부터 이들을 '지역법관'으로 비례 공식화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고 재판부의 잦은 이동을 방지해 재판 충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寄予되었다. 2004년 260여명의 지방

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과 예비판사가 향판을 지원했으며, 2005년에는 신규 예비판사와 기존 법관 가운데 약 80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근무지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고등법원 관할지로 구분된다. 현재 전체 법관 가운데 약 40%가 향판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사생활 보호" 이유를 들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심서 혐의 인정했는데 '항소심 무죄'

변호인·재판장, 연수원 동기에 울산지역 '항판'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울산지검 소속인 박아무개 수사관이 성아무개씨한테서 자신의 계좌를 통해 달마다 850만원씩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나섰다. 이후 검찰은 성씨로부터 "상태대업소 주인과 종업원이 단속에 걸린 사건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동업자한테서 1400만원을 받아 박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울산지검은 성씨의 동업자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업소 주인의 계좌에서 수표가 인출된 사실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지난해 9월 1일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같은달 7일 박씨를 적위해제했다. 부산지검은 보름 뒤 박씨를 징계파면했다. 박씨는 1심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해 9월 27일 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뜻밖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씨의 "수사검사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다"고 하고, 부장검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성씨와의 동기에도 문제가 없겠다"고 회유해 법정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1심 변호인인 사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검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다'며 성숙한 탓에 1심 법정에서 거짓 자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시목

된 사변호사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크게 반발했으나 소용없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박씨를 기소 직후 파면했으므로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했다는 박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수사 당시 박씨에게 '죄질이 나빠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장검사는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변호사도 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박씨가 내게 '수사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라고 회유한다'는 말을 꺼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그 부장판사는 공보문사를 통해 "판결은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재판장과 박씨의 항소심 변호인 사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177)이자, 울산지역의 '항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사변호사가 개업 뒤 1년 동안 수입한 울산지법 형사 항소심 사건 가운데 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사건을 분석해 보니, 피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피해자와 합의 등의 '사정변경' 없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7~9월 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가운데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또 피고인 124명 가운데 국선변호인, 공익법무관이 변론한 피고인과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은 98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사정변경 없이 감형된 피고인은 19명(19%)에 그쳤다. 이는 사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에 비해 감형률 차이가 25%나 낮은 것이다. 그나마 지

집행유예중 재범죄 17명도 실형→벌금형

항판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피고인이 17명이나 됐다. 형법(62조)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만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대전지법 출신 사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고아무개씨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법을 '실형을 선고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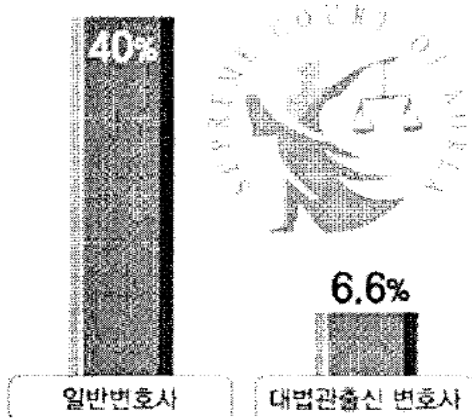
다'고 해석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대곡해 감형한 것이다. 특히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들 피고인 17명 가운데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앞선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가 15명이나 됐다. 사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5명을 변론해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벌금형으로 깎아준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협회 소속의 한 초임 변호사는 "전관 출신 판관이 아니라면 결코 그런 판결을 받아낼 수 없다. 일반 변호사는 전혀 불가능한 노력적인 파주기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지

전관예우 '몸통'은 前대법관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수임료도 많고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고위 간부는 7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판·검사의 전관예우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률



〈자료: 임종헌 의원실〉

무소속 임종헌 의원은 일반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이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6%라고 지적했다. 즉 일반 변호사들이 맡은 상고사건 100건 가운데 40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기각되지만, 대법관이 변론을 맡은 상고사건은 100건 가운데 6.6건만 기각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이 199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들의 수임사건을 조사한 결과, 13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63%가 대법원 상고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 폐해의 핵심인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라면서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배헌태 홍보심의관(판사)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중요한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보다 기각률이 낮지 않겠느냐.”면서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많이 맡는 것은 상고사건을 신청한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변호사 개업 제약' 추진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인 명단에 전 대법관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 대법관들이 기록을 관심 있게 읽어본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그래서 대법원 상고 사건을 맡은 일반 변호사들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변호인 명단에 함께 올리는데 거금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준다.”고 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관 출신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 대법관 출신 극소수

무소속 임종헌 의원은 일반 변호사의 심리불속

이런 논란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이나 예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대법원장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관 출신이 예우를 선택하면 무료법률 상담 등 공익활동을 하면서 재직시 급여의 80~90%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종인 의원도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이 담당하게 될 사건의 수임을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용어 클릭

●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의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제도에서 형사사건은 제외된다.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기 사법지 : 2007-08-08 1

[Seoul Law] “변호인단에 ‘대법관 이름’ 올리려 거액 사례”

대법원의 상고 사건이 매년 수백건씩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법원의 사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수는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기록을 검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 명단에 들어있으면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유심히 본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맡았을 때 변호인 명단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 현황

퇴임대법관 (현 근무처)	총 수임 사건 수 (개)	대법원 수임 사건 수(개)	대법원 수임 사건 비율(%)	심리불속행 기각률(%)
배만운 (개인변호사)	738	413	56.0	6.9
윤영철 (개인변호사)	229	140	61.1	5.7
최종영 (법무법인 바른)	69	49	71.0	6.7
천경송 (법무법인 바른)	401	248	61.8	5.3
정귀호 (개인변호사)	191	157	82.2	7.3
안용득 (개인변호사)	687	412	60.0	4.6
박준서 (법무법인 광장)	486	274	56.4	9.1
이돈희 (개인변호사)	105	99	94.3	7.1
신성택 (법무법인 율촌)	541	307	56.7	6.3
이임수 (김앤장)	372	260	69.9	12.5
이용훈 (대법원장)	449	335	74.6	3.0
송진훈 (법무법인 태평양)	151	140	92.7	5.7
서성 (법무법인 세종)	189	77	40.7	5.5
계	4608	2911	63.2	6.6

(자료 : 임종인 의원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기록은 신경 써 검토” 고백

서울 서초동의 한 개인변호사는 7일 “대법원 사건을 맡을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변호인단에 올리기 위해 그에게 수천만원을 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 대법관의 이름이 변호인단 명단에 들어 있어야 대법관들이 수많은 사건 기록 가운데 아무래도 내가 맡은 사건을 읽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서류 검토 외에는 전혀 사건 실무를 하지 않는 대신 이름만 빌려주고 적어도 1000만~2000만원을 받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관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이름을 변호인 명단에 올리면서 돈을 주고받는다는 말을 몇번 들은 적이 있다.”면서 “반드시 없어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명단이 있는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쓸까. 대법관을 지낸 D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을 처리할 때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무제(현 동아대 교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휴일에도 일하고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가운데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모두 읽고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을 지냈던 서울대 법학부 신동운 교수는 “대법관은 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깊이있게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사건 담당 변호사에 함께 일했던 퇴임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바쁜 상황에서 기록을 신중히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법관 전관예우는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해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 대법관과 현재 재판관 비교

	급수	임기	인원	역할
대법관	장관급	6년	13명	상고심 담당 최고법관
현재 재판관	정관급	6년	9명	원법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3고 법관

■ 2003년 이후

퇴임 대법관 현 근무처(총 14명)

손지열 (김영장)
이규홍 (광정)
송진훈 (태평양)
서성 (세종)
변재승 (화우)
최종영(전 대법관장·바른), 박재윤 (바른)
유지담 (KCL)
이용우 (코고스)
윤재식, 강신욱 (개인변호사)
이강국 (태평양 전 고준, 현 헌법재판소장)
조무제 (동아대)
배기원 (영남대)

■ 2003년 이후

퇴임 현재재판관 현 근무처(총 10명)

이상경 (아우)
권성 (대우)
김효정 (한송)
송인준 (서린)
현대현 하경철 김영일 김경일 주선희 (개인변호사)
전효숙 (변호사 미등록)

●책3권 분량 사건 하루 5~6건 처리... 기록 제대로 못읽어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들이다. 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한 간부는 “대법원에 연간 접수되는 사건은 모두 2만여건이지만 대법관은 모두 13명에 불과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하루 평균 5~6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법원 판사는 책 2권 분량 기록의 사건을 하루에 2~3건씩 처리해야 하는데, 대법관들은 책 3권 분량의 사건을 하루에 5~6건씩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법관들은 제대로 서류를 읽지도 못하고,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10대 로펌 퇴임 대법관 서로 '모시기'

"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대리하면 대법원과 의사소통도 잘 되고 대법관이 사건 기록을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로펌에서 경쟁적으로 대법관 출신을 영입합니다." 국내 5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A로펌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퇴임한 대법관들이 대형 로펌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들은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3년 이후 퇴임 14명중 9명 대형 로펌 소속

지난 2003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 14명의 현황을 추적해봤다. 9명은 10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으며, 2명은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강국 전 대법관은 태평양에 근무하다 올해 초 현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2명은 학계로 갔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김앤장에, 송진춘 전 대법관은 태평양에, 서성·이규홍·변재승 전 대법관은 각각 세종·광장·화우에 몸을 담고 있다. 박재윤·유지담·이용우 전 대법관은 각각 법무법인 바른과 KCL, 로고스에 동자를 틀었다. 모두 10대 대형 로펌이다. 윤재식·강신욱 전 대법관은 개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B로펌 대표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보통 중요한 사건을 맡는데 이런 사건들은 보통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퇴임후 각각 모교인 동아대와 영남대에서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조무제·배기원 전 대법관은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더 받겠지만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대형 로펌행은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진다. 1990년대에는 퇴임 대법관 21명 가운데 7명이 로펌행을 택했고, 14명은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최근 전 대법관들이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성장한 대형 로펌이 기업의 소송을 많이 대리하면서 자본이 몰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통합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에 있는 대형 경제사범 사건과 대부분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면서 "퇴임 대법관의 배임·횡령·기업인 사건 수임 사례를 보면 이임수·서성 전 대법관은 4건, 윤재식 전 대법관은 6건, 신성택·김형선·박준서·이용우·정귀호 전 대법관은 각각 1건씩 수임했다."고 말했다.

● 대형 기업 사건 수임 많아... 월 보수 3000만~2억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구속 기소되자마자 대법관 출신의 정귀호·이임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윤재식 전 대법관은 두산그룹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김동철 의원은 "대형 로펌에 속한 7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월 보수액을 조사한 결과 한 달에 적어도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승용차와 기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상징성을 가진 법관들이 퇴임 뒤 보통 사람보다도 더한 이익추구 행태를 보이며 명예와 권위를 잃고 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현재 재판관 출신은 로펌서 '외면'

우리나라 5부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현재와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현재 재판관 9명과 대법원 대법관 13명은 모두 장관급으로 임기는 6년이다.

퇴임하고 나면 대법관 출신은 로펌에서 서로 초빙하려고 들지만, 현재 재판관 출신은 로펌으로부터 외면받는다. 현재 재판관을 지낸 변호사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로펌의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 '정치적 사건' 처리 많아 수익에 도움 안돼 꺼려

2003~2007년에 퇴임한 현재 재판관 10명의 현황을 추적해본 결과 4명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경·권성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이우와 대륙에, 김효정과 송인준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한승과 서린에 각각 몸을 담고 있다.

소속 로펌은 모두 중소 규모다. 대법관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대현·하경철·김영일·김경일·주선희 전 현재 재판관은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다가 인준 파동을 겪고 지명철회된 전효숙 전 재판관은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1990년대에 퇴임한 현재 재판관들도 대부분 개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 퇴임 10명중 4명만 중소규모 로펌에

법무법인 광장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사건은 우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많다."면서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로펌에서는 현재 재판관을 지낸 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영입활동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법원 간부에게 헌법재판소에 가라고 하면 별로 내키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현재로 갈 바에야 차라리 몇 년 더 있다가 대법원에 가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법무법인 화우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재판관보다 대법관 출신을 훨씬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퇴임 뒤 수임료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기사일자 : 2007-02-08 !

홍포화하는 한국사회 ㊦ 강력범죄 줄이자

홍악법은 공소시효 없애고 상습범 엄벌주의 강화해야

"얼마 전 근처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젠 정말 밤길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요."

경기도에 사는 박재연 씨(25·가명)는 요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8)을 둔 신 모씨(46)도 "유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 내려앉아요. 당분간 아이가 학교나 학원 오갈 때도 차를 태워줄 생각입니다"라며 최근 잇따르는 홍악범죄에 등서리를 졌다.

"나와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홍악사건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0건 중 1건은 범인 못잡아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발생한 범죄 10건 중 1건꼴로 범인을 잡지 못했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범죄는 189만건이지만 검거율은 85.7%에 그쳤다. 이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이 기간 평균 검거율은 약 9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반인륜적인 홍악범죄에 대해서는 시한없이 '범인'을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경 동국대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반드시 불발하게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야 모방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진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철저한 과학수사와 수사능력이 뛰어난 형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철저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법 어린이 유괴범죄에는 아동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만드는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특히 홍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영화 '그놈 목소리'에서 다뤘던 이 모순 유괴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살종 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모두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살인죄에 대한 우리나라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일본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 독일은 30년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없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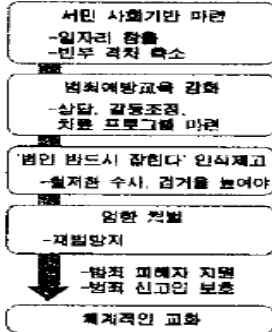
특히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강

연도별 사건 검거율 (단위=천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율
2001년	1,985	88.8
2002년	1,977	92.4
2003년	2,004	88.6
2004년	2,080	89.4
2005년	1,893	85.7

* 검거율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 건수
자료=대검청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악범죄 줄일 방안은



*전문가 평가대 미해결 교수, 경찰대 미해결 교수, 고려대 범죄학 교수, 동국대 범죄학 교수

간·강제 추행죄 7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강간 등에 의한 상해 치사상죄 10년 등 5-10년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며 "공소시효를 남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이 상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폭력을 두고 있다.

◆재범 악순환 차단도 시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등 교정 시설에 한 번 갇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잣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만 범죄 예방기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천대 윤강 불법사위대의 독

주족 등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일탈 행동을 계속하게끔 유도한다는 것. 특히 범죄자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범에 대한 엄한 처벌도 요구된다.

법두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잡혀도 몇 년만 교정시설에 머물다 나오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사라지도록 뒷잡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폭력을 미화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폭력을 미화하고 빈부격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홍악범죄 명분이 되거나 동기가 된다"며 시민에게 범죄행위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또 홍악범죄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최악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끔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한태수 고려대 교수는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며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나 사회적 제도가 없다고 느낄 때 시민들은 미해결식을 갖고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인권보호 철저히

범죄가 발생하면 사건 자체와 가해자에게만 관심이 쏠린다 보니 경찰 피해자 인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인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4년간 범죄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사기(22.2%) 폭력(21.8%) 살인(12%) 성범죄(13.8%)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다"며 "이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대경 교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학교에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교육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상담, 치료, 갈등조정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 교수는 "범죄 유형별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계만·박승철·박소운기자

온정주의가 범죄 키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이 범죄 정상설을 통해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존재한다'고 했듯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범죄의 흉악성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 등 신종 범죄의 출현, 이윤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몰지마식 범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유괴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청소년폭력에 방재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악해지며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범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했다. 몇 년 전에 네 살 된 어린이가 성폭력 전과자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뒤 토막 난 시체로 버려진 일이 있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가 살해한 뒤 불태워 버린 엽기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해 만 13세 미만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00여 건이었다. 성범죄의 특성상 10% 미만의 낮은 신고율을 감안하면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유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달만 해도 인천에서 초등학교생을 유괴한 이모 씨가 완전범죄를 위해 아이를 산 채로 저수지에 던져 살해한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 여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셋째, 불특정인을 노리는 '몰지마식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10월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도로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향해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이고 달아난 사건을 들 수 있다. 몰지마식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제보에만 의지할 뿐 공조 수사나 과학수사에서 많은 허점을 노출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유괴 범죄, 몰지마식 범죄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공권력의 힘만으로는 감당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려고 당국도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민간 경비업체와 협력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내용, 전자팔찌 착용 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12, 13세)을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소코구금) 제도 신설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범죄 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사회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엔 원칙과 기준과 법을 생각하지 않고 때만 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퍼져 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에 불리할 때 무조건 생떼를 쓰면 된다는 생각은 곧박하다.

둘째, 범죄나 비행에 대한 고발 또는 신고 정신이 무뎌야 한다. 온정주의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아 범죄를 보고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정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범죄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내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범죄를 철저히 신고하자.

셋째, 범죄 방지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넷째, 범죄 예방과 방지에 대한 시민운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역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범죄 예방과 방지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용준

연세대 법무대학원
강의교수·한국형사
사법학회 회장

절반 구속재판... 대부분 집행유예

#사례1 2005년 3월 2500만원의 돈을 매일 처지에 놓인 A씨가 중국의 한 호텔에 돈을 빌려간 B씨의 빚을 때렸다. 동맹한 사람에게 B씨를 근처 공시장으로 데려가 폭행하도록 한 후 다음날 오전까지 잡아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폭처법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중국까지 찾아가 과도하게 빈틈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B씨가 아직 눈을 감지 않고 있으면서 과다하게 피해변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B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A씨가 실행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례2 불법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2월 딸인 D(여)씨가 집을 때렸다고 의심하고는 D씨를 달린 대가리로 끌고가 집을 내놓으라. "면서 각목으로 때렸다. C씨는 각목이 부러지자 쇠파이프로 D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한 시간여 동안 불법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를 받은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승연 한화외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절반가량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 실형 선고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선고된 폭처법 위반 사건 200건 중 집단·총기 등 상해와 감금 혐의 등이 적용된 사건은 80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서도 김 회장이 의심 받는 것처럼 집단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폭행을 한 경우나 피해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재판
2007년 1~4월

전체 80명
구속 37명 (불구속 43명)

불·불류(자연결과)	징역형 기간	사회봉사명령
실형 19명	1년 이상 31명	20명
집행유예형 59명	1~2년 43명	
보통형 1명	2년 이상 3명	
무죄 1명		
공소기각 1명		

(자료: 서울중앙지법)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사례 1~2' 정도가 그나마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될 뿐이었다. 이번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만큼 찾아보기 드물다는 얘기다.

● 실형은 23%인 19건에 불과

전체 80건 중 절반가량인 37건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 또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23.75%인 1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 중 무죄·방금형·공소기각이 각 1건씩이었고, 58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58건 중 20건에는 80~24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 총기나 솔자리 사건이 절반

전체 80건의 사건 중 휘증이나 솔자리 등에서 일어난 사건이 절반인 40건이 됐다. 또 이 사건들에서 총기로 분간한 물건도 대부분 소주병, 맥주병, 맥주컵 등 그 자리에서 눈에 잘 띄는 것들이 이렇듯 '맞잡에 술함'으로 변해 사건이 많았다. 이번 김 회장 사건의 최초 원인이 됐던 청담동 G카페에서의 사비처럼 솔자리나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 등으로 큰 싸움이 된 예는 대부분 술과 관련이 있었다.

홍승규기자 cool@seoul.co.kr

후시...

경기 안산시 여성 시신 발견

화성 연쇄 살인 연관성 수사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야산에서 암매장된 여성의 알몸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8일 '사사동 야산 정상 부근에서 간헐적으로 하던 인부들이 오늘 오전 11시쯤 땅속에 파묻힌 여성의 알몸 시신을 발견했다. "면서 "다리 부위와 노출돼 인부들이 사할 시신임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며 부패 정도로 미뤄 숨진 지 2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경찰은 '암매장된 여성'의 키는 160~164cm로 연쇄살인사건 피해 여성들의 키(153~156cm)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 덧붙였다.

연산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입찰정보에 5억 약속' 수취 적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위 간부가 브로커와 결탁해 복점업체로부터 공사 발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고위 간부는 지난해 333억원을 투입해 공항 내·외부와 활주로 주변의 경비 및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S사 영업상무로부터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교 후배인 브로커 A씨를 통해 S사가 수주할 경우 자신과 브로커 A씨가 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A씨가 S사로부터 받은 1억원이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는지를 김 회장에서 밝혀야 하는 만큼 수사를 의뢰했다. "면서 "형법에는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수취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히로통 유통 66명 검거

경기도 형사경찰서는 8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통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부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6명을 검거, 중간공급자 서모(6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서씨 등으로부터 히로통을 구입, 상습추적한 혐의로 오모(48·맥사문전사)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박모(25·여·유통업소 종업원)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